

‘초대 시장’ 노리는 입지자들, 시·도 경계 넘어 외연 확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거대 이슈 따라 세 확장 물밑 경쟁 치열
민형배·신정훈 등 곳곳 현수막…강기정, 도민과 상생토크 계획

오는 6·3 지방선거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인해 ‘전남광주특별시’의 초대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출마예정자들이 광주와 전남의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광복 행보를 보이면서 선거판을 조기에 달구고 있다.

아직 통합 특별법 제정과 선거구 획정이라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지만, 기존에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출마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넘어 외연 확장을 위한 타 지역 유권자와 접촉면을 넓히는 등 치열한 물밑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사·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광주와 전남,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출판기념회나 조직 다지기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이슈를 고리로 광주와 전남을 넘나들며 인지도 제고와 세 확장을 시도하는 ‘월경(越境) 정치’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거리 풍경이다. 선거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주 도심 곳곳에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얼굴이, 전남 시·군에는 광주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광주시장 후보군인 민형배(광주 광산) 의원의 현수막이 전남 전역 주요 길목에 게시되는가 하면, 전남지사 출마가 거론됐던 신정훈(나주·화순)·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의 사·도통합과 관련된 현수막이 광주 시내 교차로를 점령하는 이례적인 ‘현수막 원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합 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상대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려는 사전 정치 작업으로 풀이된다.

현역 단체장들의 행보도 거침없다.

강기정 광주지사는 ‘통합 전도사’를 자처하며 활동 반경을 전남 전역으로 넓혔다. 29일 장성군을 시작으로 여수시, 영광군 등 동·서부를 순회하며 ‘도민과의 상생토크’를 이어갈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통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주민 의견 수렴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광주에 국한된 인지도를 전남 바닥 민심까지 확산시켜 통합 시장으로서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안방 사수’와 ‘적진 공략’을 병행하는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통합 공청회를 열어 기존 지지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동시에, 광주시청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남구 다목적체육관 등 광주의 심장부에서 잇따라 토크 콘서트와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며 광주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인구수가 절반에 가까운 광주 표심을 잡지 않고서는 통합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십분 활용해 통합 논의의 중심에 섰다.

자신의 지역 기반인 나주시 물론 무안·순천·해남 등 전남 전역에서 공청회를 직접 주재하며 ‘정책 통’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선명성’을 무기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사·도가 합의한 ‘전남광주특별시’ 명칭과 ‘청사 분산 배치’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민 의원은, 통합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전남 동부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순천·여수·광양 등지를 돌며 ‘국토 남부 신산업수도 개발청’ 설립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현역 단체장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준호(광주 북구갑)·주철현 의원은 ‘경제 비전’을 매개로 연대와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두 의원은 최근 순천대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동부권의 산업·경제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이슈전에 가세했다.

이 밖에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광주 지역 주요 행사에 빠짐없이 얼굴을 비추며 접촉면을 늘리고 있고,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역시 광주·전남 공동 포럼을 준비하며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불가능하지만, 입지자들에게 행정통합 이슈는 시·도 경계를 넘어 합법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이라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 3일을 기점으로, 통합의 주도권을 쥐고 지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잠룡’들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선인 기자 sunin@



민중 지도부, 이해찬 전 총리 마지막 배웅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광주·전남 지방선거 경선, 권리당원 선택 폭 늘어난다

공관위 국회의원 배제 초강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관리 기구 참여를 금지한 데 이어 현역 국회의원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참여도 배제하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과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정에도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이 도맡는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지만, 이마저도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참여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이다.

이는 갑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현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현금을 받았다

는 의혹과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강서구)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참여가 제한되면서 광주·전남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의 선택 폭을 늘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통상 국회의원 조직에서 자신들의 선거구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공천을 장악했던 관행이 표면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실제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하겠다”면서 “공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를 의무화하겠다.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 산하에 ‘중앙 통합 검증센터’를 설치해 경선 과정에서 유효될 수 있는 허위·조작 정보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콘텐츠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 광주·전남의 현실 탓에 민주당이 각종 제도가 제대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현역 의원의 공천 과정 배제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꼼수가 난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원을 대부분 현역 의원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현역 국회의원이 사실상 후보자를 결정하는 지방선거 공천 특성상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공천 현금 등 구체적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게 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우 의장 “여야, 국민투표법 개정 응답해야”

“지선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직무실에서 ‘시민주도 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동시 실시를 위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우 의장은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여야가 조속히 법 개정에 응답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개정안은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민생법 100개 처리 ‘속도전’

오늘 국회 본회의…여야, 이 대통령 “국회 느리다” 지적에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 100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현재 야당과 약 60여 개 법안 처리

를 협의 중이며, 이를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국회에서도 개혁 입법 완수와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본회의의 부의 법안 현황을 여야에 공유했다. 처리 대

상에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에 대응해 의장단의 사회권 이양 규정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다만 산업 스파이 대응을 위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외곡죄’ 신설 조항이 형법 개정안에 함께 포함돼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핵심 국정 과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T

알바 댄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A 보험GA협회
보험사기방지대책본부